

‘IMA’ 2라운드 돌입… 1호경쟁·연말인가 변수에 시장 출렁

한투·미래에셋 8년 만에 첫 인가 연말 ‘1호’ 출시 심사 경쟁 본격화 조달 레버리지 최대 300%로 확대 안정·실적배당형 전략 차별 가속화 추가 인가·리스크 점검이 핵심변수

종합투자계좌(IMA)가 8년 만에 첫 사업자를 배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두 가지’로 쏠리고 있다. 누가 IMA 1호 상품을 먼저 내놓을지, 그리고 어느 증권사가 다음 IMA·발행어음 인가를 받을지다. 두 축이 맞물리며 연말 자본시장에 사실상 ‘2라운드’가 열린 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IMA 업무를 허용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받아 기업대출·회사채·프리IPO 등 기업금융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고, 대신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예금보다 높은 연 4~8%대 중수익을 목표로 하면서도 사실상 원금이 보전되는 특성이 알려지며 투자자들



미래에셋증권.

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정 직후 두 회사는 곧바로 약관·투자설명서 심사에 들어갔다. IMA는 금융감독원이 상품의 구조·위험등급·운용 방식을 정밀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에 심사를 가장 먼저 통과한 한 곳



한국투자증권

/각사 제공

이 ‘IMA 1호’ 타이틀을 갖는다. 실제 시장에서는 12월 초중순 출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략은 같긴다. 한국투자증권은 안정형 상품을 우선 출시하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국내 기업금융 중심 구성으로 신

뢰 확보에 집중한 뒤, 수요에 따라 배당형·프로젝트형·성장형 등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첫 상품부터 실적배당형 구조를 택했다. 해외 대체투자·글로벌 IB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장성이 높은 자산을 담아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과 차별성’의 대결로 보고 있다.

이번 인가로 두 회사의 운용 가능 재원도 크게 넓어진다. IMA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추가 조달이 가능해 기존 발행어음 조달(200%)과 합치면 최대 300%까지 확대된다.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은 한국투자증권 12조219억원, 미래에셋증권 10조4586억원이다. 두 회사가 새로 확보 가능한 조달 규모만 10조~12조원대에 이른다. 조달금의 일정 비중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A등급 회사채·중견기업 대출은 실적 인정 비율이 제한된다.

동시에 시장의 관심은 ‘다음 순서’로 향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IMA 인가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삼성·메리츠·신한·하나 등 대형사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도 연내 결론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IMA 1호 경쟁과 추가 인가 판정이 거의 같은 시점에 맞물리면서, 조달 구조와 리테일·IB 체계가 각각 어떻게 재편될지가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됐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감독원도 ‘속도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무리한 출시를 막기 위해 IMA 전담 TF를 운영하며 약관·설명서·리스크 구조를 초기 단계부터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첫 상품이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려는 조치다. 최근 해외 펀드 전액손실 사례로 판매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점도 감독 강화 배경으로 지목된다.

연말에 정해질 IMA 1호와 차기 인가 대상은 내년 증권사 자금 운용 방향을 결정짓는 첫 단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초기 상품 구조와 조달 규모가 사실상 시장 기준이 되는 만큼, 후발 주자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BK 홈플러스 관련 ‘직무정지’ 사전 통보

금감원, GP 중징계 착수절차 돌입
홈플러스 RCPS 변경 조사 집중
국민연금 위탁사 영향 가능성 확대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계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불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자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

“방치 된 카드포인트 자동사용으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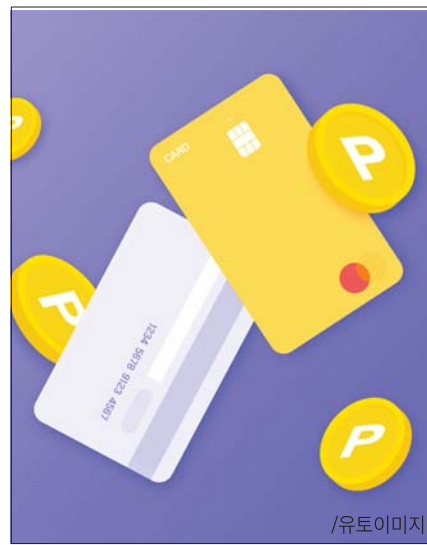
금감원 Q&A

명세서 기반 원스톱 사용 서비스
문자알림·교육·통합조회 홍보 강화

곧 소멸될 카드포인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포인트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사용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포인트를 확인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 소멸된 카드포인트 규모는 약 15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포인트 소멸을 줄이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로 확대 도입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손쉽게 신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65세 이상)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동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나 A 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한 ‘포인트 원스톱(One-stop) 사용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카드사들은 현재 표준약관에 따라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명세서에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지만, 단순 안내에 그쳐 소비자가 실제로



/유투이미지

포인트를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이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와 홍보·교육도 강화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명세서를 통해서만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어, 명세서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소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됩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즉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비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고령층 대상 자동사용 서비스는 충분한 사전 안내와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證, 국내 첫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금융기관 참여허용 시장 저변확대
대출·거래 연계 ‘기후패키지’ 구축

NH투자증권이 24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가 배출권 시장에 증권사 등 제3자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배출권시장의 문이 금융권까지 열리면서 국내 탄소시장 구조가 한층 다변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NH투자증권과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NH농협은행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우

대 등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의 ‘기후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했다.

윤병은 NH투자증권 대표는 “기업 보유 배출권을 전략 자산군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은행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기업이 친환경 투자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구조로 추진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본격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위탁

매매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위탁매매 시행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 편리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기도 했다.

위탁매매 시행 전까지는 개별 시장참여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에는 배출권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골자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시장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